

한 · 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8. 10

통일정세분석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8. 10

여 인 곤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정상회담 개최 배경	3
1. 양국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3
2.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의 양자관계 발전	5
3. 최근 양국 간 갈등 해소의 필요성	11
III.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13
1.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	13
2. 다양한 분야의 양자 협력 확대	14
3.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16
4.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17
IV. 정상회담 평가	18
1.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 확립	18
2.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유지	19
3. 호혜적 실용외교 추진	20
4.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21
V. 정책적 고려사항	22

표 목 차

<표 II-1> 한국의 대러 교역추이	6
<표 II-2> 한·러 관계 전개과정	9

I. 문제제기

- 한·소 수교(1990. 9. 30) 직후 소련이 붕괴(1991. 12. 21) 되었으나, 양자관계는 구소련을 국제법적으로 승계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의해 발전되어 왔음.
-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서울 정상회담 시 양국관계를 새로이 규정한 『한·러 기본관계조약』이 체결(1992. 11. 19)되었고,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관계’로 특징 지워졌음.
-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1994. 6. 1~3)를 계기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확립되었음.
 - 그러나 한국의 대규모 지원이나 투자의 부재, 제1차 북핵위기 해결과정(1993~1994)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1997~1999)에서 러시아의 소외, 정보외교관 상호 추방사건(1998. 7) 등으로 한·러 관계는 악화되었음.
- 양국 관계는 옐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1999. 5. 28)을 통해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였음.
- 이후 한·러 관계는 푸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2004. 9. 21)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특징 지워졌음.
- 제17대 대통령에 취임(2008. 2. 25)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5. 7 취임)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9. 28~

10. 1)하고 한·러 정상회담(9. 29)을 가졌음.

-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임.

- 본 보고서는 금번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회담 결과를 평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II. 정상회담 개최 배경

- 금번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실용주의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후로 양자 관계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는 점, 최근 양국 간 노정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개최된 것으로 분석됨.

1. 양국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국익을 증진하되, 경제면을 중시하고 외교에 따른 행동에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견지한다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음.
 - 실용주의 외교의 주요 목표는 신뢰관계가 훼손된 한·미동맹의 복구, 외교지평을 아시아 전체와 호주로 확장하는 신아시아 협력외교, 전 세계적 에너지 외교 추진, 국가위상에 적합한 기여외교, 문화코리아 외교 전개 등임.
- 이와 관련 우리 외교통상부는 대러 외교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정하고 있음.
 - ①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의체제 강화
 - ②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사업 확대
 - ③ ‘2012 APEC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및 ‘2014 동계올림픽’(소치) 인프라 구축 참여

- ④ ‘2008 한·러 우주협력의 해’ 계기 첨단 우주산업 협력
- 또한 2008년도 추진 대러 외교일정으로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방러, 한·러 포럼을 계획하였음.
-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2000. 1~2008. 5)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면서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대외정책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를 계승하고 있음.
 -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심도 있고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정, 비핵화, 남북한과 경협 확대 및 다자간 경협 모색, 평화적 통일 등임.
 - 러시아는 남북한이 통일 시까지는 대화의 증진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과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는 전통적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을 위해 TSR-TKR 연결, 원유·천연가스와 전력 공급, 국경무역, 수산물 가공 및 어업, 남북 도로연결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중·일·몽골과의 다자간 경협을 기대함.
-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분야 경력과 에너지외교 강조로 러시아는 우리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방러 경험도 한·러 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가스관·송유관 연결, 대북 송전망 건설 등에 대한 채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접경국이며 남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국가로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미·일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외교카드를 활용해 한국의 미·일 중시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기와 같이 한·러 간에는 정치, 경제, 우주산업 분야와 한반도문제 해결 등의 면에서 상호이해가 일치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에너지와 철도 협력,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등 경제면에서의 양국 간 이해일치가 상당히 부각됨.

2.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의 양자관계 발전

- 한·러 양국 정부간 이해일치의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의 양자관계는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왔음.

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 한·러 양국 교역액은 러시아의 신속한 경제회복(연 평균 7% 성장률)으로 2005년 78억 달러에서, 2006년 98억 달러, 2007년 151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표 II-1> 참조).
 - 2008년에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의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대부분 천연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의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여 왔음.

<표 II-1> 한국의 대러 교역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증감율 %)

수출입 / 연도	2005	2006	2007	2008(1~8)
수 출	39 (65.2)	52 (34.0)	81 (56.2)	58 (27.3)
수 입	39 (7.2)	46 (16.2)	70 (52.6)	71 (41.2)
교역량	78	98 (25.6)	151 (54.1)	129
무역수지	0	6	11	13

출처: “주요 지역별 수출·입 동향(2008.8),” <http://www.mofat.go.kr>(2008.9.30); 주러시아 대사관, “한·러 경제관계 현황,”(2007.09) 참조.

- 2008년 3월말 현재 한국의 대러 실질투자액은 762건, 6억5,085만 달러이고, 투자신고액도 13억4,1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임.
 - 한국의 대러 실질투자액은 대중 투자액 234억 달러의 2.8%에 불과해 러시아의 대한국 관계에서 최대 불만 요인임.
- 최근 러시아가 중동과 동남아에만 편중됐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

급체계에서 핵심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7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38,129,000배럴)이 2006년(13,973,000 배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함.
- 서캄차카 인근 해상유전(30~40억 배럴 추정)을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컨소시엄과 러시아 국영정유사 「로즈네프트」가 공동개발하기로 함.

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 이명박 당선인은 동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된 한·러간 협의 진행의 상세한 파악 및 협의를 위해 특사(이재오 의원)와 6명의 특사단을 러시아에 파견(2008. 1. 20~25)했음.
- 이재오 특사는 주코프(Zhukov) 부총리, 라브코프 외교장관, 프리호드코 대통령 외교보좌관, 폴리콥스키 환경원자력감독처장(한·러 경제공동위원장), 야놉스키 산업에너지부 장관대리,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을 면담했음.
 - 동부 시베리아에서 연해주 일대에 이르는 동북아시아를 21세기 평화와 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에 주코프 부총리도 공감함.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사업에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 제공을 조건으로 공동 참여하는 내용임.
- 주코프 부총리는 ‘극동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음.
 - 이명박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 기업인들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시켜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자는 구상임.
-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2012)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사할린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 및 관계도로 건설 사업, 항만 경제특구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구함.
- 이재오 특사는 대통령 외교보좌관을 만나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 한·러 협력에 대한 당선인의 뜻을 강조했음.
- 러시아는 연해주의 정유나 조선업 같은 새로운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협력, 극동의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 등의 건설에 한국의 투자,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등을 제안함.
 - 러시아 정부는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이후 빠른 시일 내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25)에 줍코프(Zubkov) 러시아 총리가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의 축하와 안부인사를 전하고 양국 간 투자와 교류증진 방안을 논의했음.
- 줍코프 총리는 러시아의 역대 우리 대통령 취임식 참석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임.
 -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시일 내 방러를 요청함.
-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한·러 관계는 <표 II-2>와 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표 II-2> 한·러 관계 전개과정

2008년	주요 내용	주요 논의사항
3.28 (서울)	2008~2009년 외교통상부간 교류 계획서 서명	-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 - 외교차관 및 담당 실국장 연례 상호 방문,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문화·영사 분야 협력 등
4.7	이명박·푸틴 대통령 전화통화	-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지속적 역할 요청 -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4.8)에 감사 -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논의 - 푸틴 대통령의 방한 제의
5.20	이명박·메드베데프 대통령 첫 전화통화	- 러시아 대통령 취임 축하 -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방러 기대 - 투자 증대, 철도분야 협력, 북핵문제 협력 등 의견교환
5.20 (서울)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방한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면담 - TKR-TSR 연결사업 협의
5.27 (모스크바)	차관급 대화	- 권종락 제1차관 방러 - 한·러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추진방안, 북핵문제 등 논의
5.29 (모스크바)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바라다브킨 외교차관 - 비핵화 2단계조치 마무리 및 차기 6자 회담을 통한 3단계 협상 개시 문제 등 논의
5.29~30 (모스크바)	제9차 한·러 포럼	- 러시아외교아카데미와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년 이후 공동개최
7.8 (모스크바)	한·러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	- '한·러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Action Plan'(2005.11)에 포함된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 연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BEPA 공동연구를 진행기로 이미 합의(1차회의 2007.10.31~11.1, 서울) - 상품교역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협의
7.9 (도야코)	G8 정상회담(7.7~9) 계기 한·러 정상회담	- TKR-TSR 연결사업과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통과 등 남·북·러 3각협력 실현을 위한 긴밀 협력 논의
7.23 (싱가포르)	ARF 계기 한·러 외교장관 회담	- 금년중 대통령 방러, 에너지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 북핵문제, TSR-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의견 교환
9.10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라브로프 외교장관 -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북핵 문제, 통상투자진흥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이외에 G8 개발장관회의(4.5, 도쿄), 제14차 APEC 통상장관회의(5.31~6.1, 페루),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0~12, 베이징), 6자 비공식 외교장관 회동(7.23, 싱가포르)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한·러 고위인사들의 대화가 이루어졌음.
- 한편, 우리은행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진출 이후 첫 개발금융투자 사업으로 「한·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3,6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음(5.20).
 - 이 센터는 2008년 9월 착공해 2010년 12월 완공 예정임.
- 극동 지역의 나훗카에 한국선박 전용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 「부산 항만공사」와 러시아 측이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임.
 - 2009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다는 목표임.
- 우리 정부는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10억 톤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결정(6. 24)했음.
- 또한 북한 나진항과 한국의 속초항이나 부산항을 연계 개발하는 물류사업 추진도 러시아측과 협의 중임.
 - 나진과 러시아 하산 사이 54km 구간을 잇는 철도와 나진항 개선 사업이 착공(10. 4)에 들어가 몇 년 내 완공 예정임.

3. 최근 양국 간 갈등 해소의 필요성

- 한·러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양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노정되어 왔음.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러시아 특사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방러(1. 20~25)시 대미·대일·대중 특사와는 달리 국가수반인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음.

- 소위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2006. 3. 19)과 관련, 우리 법원이 관련자 120여 명 전원에 무죄판결(2008. 2. 19)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2. 22)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불만을 야기했음.
 - 러시아 정부는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들이 모두 합법적인 학위라는 입장임.

-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측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취했음.
 -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북한 탈북자, 노동자, 외교관과 접촉한 한국인 3명이 강제출국(3. 7)됨.
 -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씨가 「러시아연방 우주청」에 의해 이소연씨로 전격 교체(3. 10)됨.

-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 관련 언론보도(「신동아」, 2008년 4월호)를 통해 한국정부의 내사 사실을 인지한 러시아 정부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공한을 보내(4. 15) 강력히 항의하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음.
 - 이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비밀내사하고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총장에 대해 지

명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항의공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러 한국대사관의 정보외교관 4명을 강제 출국시킴.

○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총장 등 모든 피고인들이 우리 법원의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국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검찰측은 법원이 이 사건의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임.

- 이 사건이 한·러 관계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 간 실용주의 외교에 기초된 양자관계 발전과 최근 노정된 갈등들의 해소 필요성 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됨.

Ⅲ.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음.
 - 우리 측의 방러 수행단에는 경제 4단체장, 주요 대기업 대표자, 금융인, 중견·중소기업인 등 33명의 경제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경제·에너지 분야 중심의 특징을 나타냄.
- 양국 정상은 회담(9. 29)에서 수교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양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10개 항에 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1.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

-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음.
- 양국 주요 현안과 한반도·동북아·국제 정세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정상간 및 정부·의회·공공과 민간 부문의 여러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가하기로 합의하였음.
 - 양국 외교당국간 제1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한·러 포럼, 문화·학술·청소년·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키로 함.

- 특히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2010) 추진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함.
- 양측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법적 기반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음.

2. 다양한 분야의 양자 협력 확대

- 양국 정상은 「한·러 경제·통상 협력 행동계획」(2005. 11. 19)의 성실한 이행과 교역량의 신속한 증가 및 상호 투자 확대를 환영하였음.
 -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 무역자유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한국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희망을 지지함.
- 양국 투자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인프라 구축 협력, 가공·첨단기술·에너지·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 등을 촉진하기로 하였음.
 -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개발을 협의기로 합의함.
 -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2012)와 소치 동계올림픽(201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사업, 석유가스 화학단지 건설,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 등에 적극 참여기로 함.

- 광물자원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였음.
 -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에서의 협력 성과, 한국 최초 우주인의 러시아 우주선 탑승 등을 높이 평가함.
 -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 등 우주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핵 비확산과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과 관련,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러시아측은 철도연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기로 함.
- 이외에 양측은 해운과 수산업 협력,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북서태평양 수역내 불법조업 방지, 범집행, 자연 및 인적 재해 예방, 국방분야 교류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단기복수사증 협정」, 「광물자원 협력 약정」, 「가스공급 양해각서」, 「나노기술 공동협력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이 양국의 해당부서 기관장에 의해 서명되었음.

3.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 아태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인구불균형 등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외교와 유엔 및 양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양측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 수단으로 수출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함.
- 양측은 그루지야 사태가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음.
- 특히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한국측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였고, 러시아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함.

4.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 양국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측에 설명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IV. 정상회담 평가

1.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 확립

-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됨.
 - 한·소 수교이후 18년 동안 양국관계가 상당히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한·러 간 대화의 수준과 폭에 불만을 가져왔음.
 -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의회 간 교류, 문화·학술·청소년·체육 등 여러 수준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러 관계를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음.
 -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외교·안보,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 협력, 우주과학,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군사교류 등으로 확대시킴.

- 러시아 언론(RIA Novosti)은 그루지야 사태가 서방에서 신랄히 비판받고 있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긴밀한 군사·정치적 동맹국인 한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10. 3) 했음.
 - 이명박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중 실용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함.

- 취임이후 한·미(4. 19, 8. 6), 한·일(4. 21), 한·중(5. 27) 정상회담을 개최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단기간(7개월) 내에 주변 4강 외교를 마무리 지었음.

2.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유지

-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현안 중 하나가 북한의 핵 폐기이고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금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유지되었음.
- 양국 정상은 국제적 차원에서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 대북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한·러 양국의 역할을 상호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한 양국 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북핵 협상이 북·미간 검증체계 문제로 교착상태에 있었고 정상회담이 경제·에너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한·러 공동성명」의 말미에 원칙적 입장만 표명됨.

- 러시아측은 6자회담의 교착 원인이 미국 대선(11. 4 예정) 때문이라고 판단함.

3. 호혜적 실용외교 추진

- 이명박 정부는 경제면을 중시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도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호혜적 실질협력이 이루어졌음.
-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6건의 협정을 체결하여 한·러 간 협력기반을 제도화하였음.
 - 에너지·자원, 투자, 산업·기술, IT 등의 분야에서 총 15건의 약정을 체결함.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나노기술협력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총 7건의 약정 등을 체결함.
- 한국은 에너지·자원, TSR-TKR 연결, 건설, 수산,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간의 MOU 체결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하기로 함.
 - TSR-TKR 연결을 위해 러시아는 북한을 설득하기로 함.
 - 한국은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2012)과 소치 동계올림픽(2014)의 인프라 구축과 극동지역 내 한국 전용항구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명태 쿼터를 연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배증시켰고, 소형위성발

사체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됨.

- 반면 러시아는 대한민국 교역구조 개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나노기술·정보화 등 첨단기술,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 WTO 가입 등의 면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는 기계·기술장비 등의 수출확대를 통해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교역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양국 정상은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개발을 협의기로 합의함.
 - 러시아의 기초기술을 한국의 응용기술과 접목하여 나노기술 등의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됨.

4.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였음.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것임.

V. 정책적 고려사항

- 금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사항을 양측이 상호 신뢰성을 갖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소 수교이후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의 정국 불안과 경제난 및 법체제 미비, 상호 신뢰성 부족 등으로 우리의 이전 정부들에서 한·러 관계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달성되지 못했음.
 - 우리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양측의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포럼」 등을 통해 실천여부를 평가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함.

- 「한·러 공동성명」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임.
 - 중·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중시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함.
 - 푸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실세 총리로서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일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공영정책 관련 각종 해설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러시아의 정부, 연구소, 언론계 등에 배포해야 할 것임.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2008. 10. 11)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차기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합의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북한이 검증 수용의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의 실효성 확보와 경제·에너지 지원의 완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임.
 -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약속분 중 현재 (2008. 10) 약 1/2 정도만 이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의 할당분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함.
-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관련, 우리 정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국익 우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원 확보,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통일 지지국 확보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반도 주변국임.
-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남·북·러 3각 경협이지만 북핵 폐기는 장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과 이 구상 실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한·러 공동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 구상의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함.

○ 경제를 급신장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극동지역 개발에 사용한 총액은 900억 루블에 불과하나 향후 6년간 극동개발에 5,670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인 바, 7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제품생산의 2.6배 증가가 기대됨.

-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의 이용가능 부지는 거의 대부분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거나 상수원 보호지대이므로 개발에 큰 장애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정책수립 시 감안해야 할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을 2011년까지 건설하여 블라디보스톡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와의 협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당초 금년 말로 예정되었던 동시베리아 송유관 1단계 사업완료 및 송유관 가동 시기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부 시공 참여사들의 더딘 작업 진척 등으로 2009년 말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는 남·북·러 3각 경협 차원에서 북한의 나진항 개량공사에 대한 한국 건설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북·러 양측에 타진할

필요가 있음.

- 북·러 간에 나진-하산 철도(54km) 및 나진항 개량을 위한 착공식(10. 4)이 거행되어 양국 간 육상수송로의 재정비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가 기대됨.
- 나진항 개량 공사의 주요 내용은 낡은 설비들의 제거와 크레인 등 새 설비의 도입, 부두의 확장 및 보강 등임.
- 3개 부두가 있는 나진항에서 북·러 간 협력 대상은 제3부두이고, 3단계로 진행되는 공사의 1단계 공사는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 계획임.

○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한국과 러시아의 해’로 지정하여 대규모 공동 문화·체육·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국 정부는 ‘2010 한국과 러시아의 해’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킴.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기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의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1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1(代), 팩스 : 901-2541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10월 일
발행일	2008년 10월 일
